

디지털 시대 시민성 교육을 위한 국어 교육의 역할

이삼형·권대호·이지선*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 국어 교육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지향점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한편, 교과와 본질적 성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사회 문화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전 지구적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다원적인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참여자 개인은 적극적으로 공공 논의에 참여하면서도 공적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디지털 시민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합리적 의사소통 교육이 기능 중심의 접근 관점에서 나아가 공공의 사회적 실천 행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과 해결의 각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에서 고려할 지점을 제시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실을 가치 체계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공적 공간으로 구성하고, 학습자들이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는 합의보다는 논의 과정을 중시하는 숙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디지털 거버넌스, 시민성, 합리적인 의사소통, 국어교육, 비판적 사고, 참여

* 제1저자 : 이삼형(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제2저자 : 권대호(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교신저자 : 이지선(덕성여자대학교 교직과 강사)

<http://dx.doi.org/10.15734/koed..115.201806.7>

1. 서론

이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을 교육하기 위한 국어 교육의 역할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변종현, 2006), 시민성은 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주 사회의 시민은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할 의무가 있다. 이 공적 소통 과정은 “지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한 행동과 커뮤니케이션(노승용, 2009 : 140)” 능력인 시민 개개인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이에 합의하고,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맥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시민성의 전제이며(김우미, 2009), 시민 교육에서 의사소통 교과인 국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제약 없이 공공 협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 참여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 참여 역량을 실제로 학습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기술 발달로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조화순, 2010; 매일경제미래경제보고서팀, 2016). 거버넌스는 ‘정부에 의한 통치(government)’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문제를 관리·운영·해결하는 민주적인 공공 협치·경영체이다. 디지털 환경은 다양한 소통 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과 정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주적인 협치 망

(network)이 형성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며 수평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기도 하였다(김관규·김관욱, 2006).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 문제는 왜곡과 편향성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온라인에 왜곡된 정보가 범람하고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만연하다는 점이 그러하고, 아울러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여 반드시 참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조화순, 2010). 이는 디지털 기술이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것과(노승용, 2009),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교육에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참여 역량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공공 의사 결정을 위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합의와 지지가 사회적 의사 결정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며, 협치 네트워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집단 지성과 개개인의 자율적인 창조성을 활용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교육은 학습자들이 시민성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합리적인 시민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최종덕, 2007).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국어 교육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다음의 두 논제를 살피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시대 소통 상황의 특성과 현안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시민성 교육에 요구되는 바를 밝힌다. 아울러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시민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문제와 국어 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과 시민 교육의 관계를 살피고, 시민 교육 관점에서 국어 교육의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성 교육의 관점에서 현행 국어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2. 디지털 거버넌스와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

2.1. 디지털 시대 협치체 형성의 가능성

디지털 기술 발달로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과 정보,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공공 의제를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에는 “상이한 관점과 무수한 입장이 공존하며 다원적 시민성이 실현되는 공동의 세계, 서로 ‘보고, 듣고, 보이고, 들리는’ 공간(Arendt, 1958 : 52)”으로서의 ‘공적 영역(the public sphere)’이 구성되었다. 예컨대 사회적 의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지향하는 공간(예 : 다음 아고라, 페이스북의 각 대학 대나무숲 등), 취미를 기반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로 출발하여 공공 이슈에 대해서 논의되는 공간(예 : 디시인사이드, MLB PARK, 레몬테라스 등), 실제 정책 과정과 직결되는 정책 청원 공간(예 : 국민 신문고) 등은 시민으로서 공적인 의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적 영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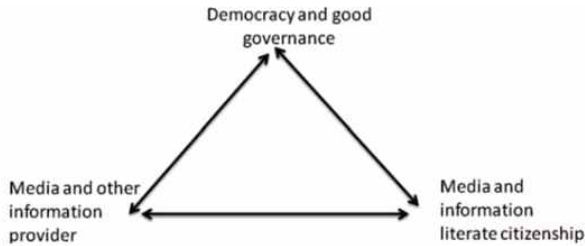
이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여러 행위자의 수평적인 협치(協治)를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국가·기업·시민·NGO 등 다원적인 주체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통치하는 메커니즘으로(권기현, 2009), 정부 중심 통치 체제(government)의 비효율적인 관료제와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국가의 역할을 배제한 시장이나 시민 사회의 자율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원적인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교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생산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지향의 권력 분산형 개념에 가깝다(조화순, 2010).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지식·정보 공유 과정에서 정보의 독점은 해체

되고 여러 주체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된다. 다중의 정보와 지식은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민주주의는 집단 지성의 자율성, 창조성, 역동성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상의 소통에 누구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과정의 부정적인 특성 역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짜 뉴스는 그 전형적인 예 중 하나다(홍숙영·정의철, 2017). 왜곡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유통되어 여론이 왜곡되는 사회 문제가 함께 등장한 것이다. 공공의 체에 대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는 여론이 협의에 이르기보다 양극으로 분열하는 집단적 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극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오미영, 2011). 과격한 표현이 빈발하거나(박창호, 2016), 타자에 대한 혐오 풍조가 생겨나기도 한다(장소연·류용재, 2017). 왜곡된 소통 양상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e-청원제도는 “①사회적 수용단계가 ②공적 수용단계를 거쳐 ③법률적 수용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의견 공유·수렴 플랫폼으로서 전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e-청원의 오남용으로 인해 이를 방지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성배, 2017 : 92).

이는 이상적인 협치체를 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예컨대 가짜 뉴스는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 언론의 상업성·정파성, 이로 인한 여론의 양극화와 확증 편향, 공중의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홍숙영·정의철, 2017 : 60).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사고 과정·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선호하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편향”이다(이예경, 2012 : 2). 이러한 편향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자 개개인의 비판적인 사고 역량이 필수적이다.

Unesco(2011)에서는 역량으로서의 시민성, 민주주의와 이상적인 협치체, 정보 공유자의 문제 등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그림] 이상적인 거버넌스의 영향 요인(Unesco, 2013:61)

이상적인 협치체로서의 거버넌스의 구성은 정보 공유자(information provider)과 시민성(citizenship)과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와 이상적인 협치(democracy and good governance)’가 실현될 수 있는 공적 영역은 기술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역량 등을 포함한 개인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정보 문식성 기반의 시민성(Media and information literate citizenship)’의 발현에 의해 형성된다. 문식성에는 분석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 정보를 해석하고 조직하는 능력, 어떤 주장이 전제로부터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평가하는 능력과 소통 능력 등이 포함된다.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비판적인 사고 역량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Unesco, 2011 : 11).

2.2. 디지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

이상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의 이익·가치 갈등을 다루고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하며, 구성원의 의미 있는 사회 참여 행동과 행위의 조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구성원들의 새로운 행동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이익·가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 범주가 확장되며, 소통 특성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이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갈등이 격화되고 왜곡된 소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고려해야 할 지점을 밝힐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갈등 격화 상황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 다양한 가치 체계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체들이 시민 사회를 구성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신기술은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공동체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이어진다. 이 선순환의 순환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결국 디지털 사회에는 사고방식과 문화가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존하게 되었고,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와의 갈등, 다양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에 이른 것이다(박선아 외 3, 2017). 또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 지구적인 초 연결망이 구성되면서, 현대의 시민 사회는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평화, 자원 등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적 공간이 전 지구적인 범위로 확장되면서 이질적인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와 사고방식이 복잡하게 충돌하는 공공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디지털 시대의 시민 사회 구성원은 이전 시기에 비해 공적 가치보다 사적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Bennett(2008)에서는 기존의 시민 사회가 ‘의무적인 시민(Dutiful Crizen)’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대비하여, 디지털 사회에서는 ‘역동적인 시민(Actualiaing Crizen)’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의무적인 시민과 역동적인 시민의 큰 차이는 개인화의 경향이다. 의무적인 시민들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한 의무를 중시하고 참여한다. 반면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중앙 정부에의 의무보다 개인적인 목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망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요컨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시민 사회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기술 혁신으로 가속화된 사회 문화 변화 상황에서의 이익·가치 충돌
- 전 지구적 연결망을 통한 다원적인 이익·가치 충돌
- 개인화된 참여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사회 문화의 급변 상황, 전 지구적인 초 연결망 속에서의 이익·가치 갈등 상황 속에서 개인화된 참여 경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상대적으로 공공 논의에 쉽게 참여하지만,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고려하며 의무감에 종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행위자 개개인이 공공성보다 개인적 목적을 선호한다면 소통 행위 자체는 늘어나더라도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거나 공동체 구성원 간 조화로운 행위에 이르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디지털 시대 시민성 교육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 내용이 급변하는 기술 혁신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 충돌의 문제를 다루며, 사적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구성원들이 공적 가치를 고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시민성 교육 관점에서의 국어과의 역할

3.1.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시민 교육과 국어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상위 이념이다. 교육과정의 근간인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 목적을 ‘국민의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부터 민주 시민 양성과 관련된 교육 이념이 강조된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 중 ‘더불어 사는 사람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간상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 추구하는 인간상

더불어 사는 사람(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민주 시민 교육’을 교과의 경계를 넘어 학습되어야 할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설정하여, 이념적 지향 수준에서 나아가 여러 교과에서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여 교수·학습 장면에서 실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9개의 주제 중 하나로 ‘민주 시민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10개로 축소된 가운데에서도 ‘민주 시민 교육’을 포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는 다음과 같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은 단지 10개의 주제 중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다른 범교과 학습 주제를 포괄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생명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다루는 인성 교육을 비롯하여,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금융, 환경 교육 등은 모두 시민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하므로, 민주 시민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하위 교육 내용이기도 하다. 다른 주제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간 시민성 교육은 시민 교육을 교과 내용 지식으로 다루는 사회과와 도덕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회과는 ‘시민 교육’을 하기 위한 내용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았으며, 도덕과는 학습자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회과·도덕과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의 수행 요소로 의사소통 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각 교과와 내용 체계를 확인해 볼 때, ‘수행 원리’에 해당하는 ‘기능’에 이해나 표현 등 소통 능력이 배치되어 있다.

- 소통 능력과 관련된 사회과의 ‘기능’ 교육 내용
조사하기, 분석하기, 참여하기, 토론하기, 비평하기, 의사 결정하기, 구분하기, 적용하기, 추론하기, 탐구하기 등

- 소통 능력과 관련된 도덕과의 ‘기능’ 교육 내용
공감 및 경청하기,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 도덕적 정서 이해·표현·조절하기,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보편적 관점 채택하기 등

이는 시민 교육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람과 관련된 학교급 교육 목표에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중)’,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고)’ 등을 포함하는 등, 소통 역량을 중요한 민주 시민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정보 전달·설득 등의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올 것을 강조해 온 국어과의 본질적인 교육 내용 중 하나이다. 시민성 교육의 관점에서 국어과는 시민성의 실천 혹은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본질로 삼아온 교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성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어과에서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3.2. 시민성 교육을 위한 국어과 합리적 의사소통 교육 내용의 검토

시민성 교육은 교육과정의 철학적 토대의 수준이므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층적 교육과정 수준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다. 교육과정은 문서의 표면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교육과정과, 진술 이면에 자리한 심층적 수준의 교육과정(deep-structured curriculum)이 존재한다. 심층적인 교육과정은 철학적·인식론적 물음에 대한 가치 지향적인 답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표면적인 교육과정이라면, 시민성 교육은 심층적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된 국어과 교육 내용이 시민 교육이라는 심층적인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인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듣기 말하기

[4국01-02]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 [6국01-0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 [9국01-09]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 [9국01-10]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 [10국01-03]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 [10국01-04]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읽기

- [4국02-04]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 [6국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9국02-05]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쓰기

-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 [6국03-04]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 [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위의 성취기준은 학습자의 언어 기능 신장을 위한 방법적 지식을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이 교육 내용들은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과의 성격을 드러낸다. 위 내용에는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구성원이 ‘합의’와 ‘지자’에 이르게 하는 데 필수적인 합리적인 의사소통 기능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합의하며 지지하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석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 정보를 해석하고 조직하는 과정, 어떤 주장이 전제로부터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평가하는 과정과 소통 과정 등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교육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고등 사고·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시민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 시민 사회의 갈등 상황에서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적인 가치를 공공성보다 중시하는 ‘역동적인 시민(Actualizing Citizen)’들이 등장하는 문제 상황에서 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는 기능 중심의 접근 관점만으로는 복잡한 쟁점을 다루고 합의를 도출하여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 문화 상황과 전 지구적인 초 연결망 속에서의 이익·가치 갈등 상황에서의 쟁점을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데 적합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시민성 교육을 위한 국어 교육의 역할

디지털 시대의 의사소통 상황은 기술 혁신의 가속화, 전 지구적인 초 연결망 구성, 참여 행위의 개인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자의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어 교육의 역할을 디지털 시대 사회 갈등 문제 상황의 측면과 이의

해결 지점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다윈 사회는 문제 상황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모순적인 상황 특성을 보인다.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익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서 시비나 사리 분별, 개인의 권익 추구와 공동체의 권익 추구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원칙’끼리 충돌하기도 한다. 예컨대 마이클 샌델은 보편타당한 두 개의 도덕적 원칙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와, ‘사람의 생명을 가능한 한 많이 살려야 한다.’라는 보편타당한 두 개의 도덕적 원칙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Sandel, 2009).

가치 갈등 상황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이 다변화된 온라인 소통 상황에서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를테면 앞에서 온라인 소통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 중 여론의 집단 극화 현상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 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하며, 어떤 쪽에 의해 풀어나가야 할지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국어교육은 학습자가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은 합의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공동선 구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공공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실을 다양한 가치 체계가 충돌하는 공적 공간으로 구성하고(Andersson, 2016), 학습자들이 표현의 기회와 자유가 보장된 상황이 합리적인 소통을 통한 공론장이 실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왜곡된 디지털 소통 상황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스스로의 디지털 소통 상황을 성찰할 수 있다. 박근영·최윤정(2014)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친밀감이나 유대감의 영향, 눈치보기와 의견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 내집

단 편향 등으로 실제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일치한다고 추측하는 거짓 합의(Pseudo-Consensus)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e-청원 제도, 공론장인 페이스북 대나무숲이나 다음 아고라, 취미를 기반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에서의 공론장 등은 각 쟁점이 구성되고 소통되는 실제성(authentic) 있는 언어 자료다. 교육 주제로도 다원적인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 상황을 고려해 모순(dilemma)과 논쟁적인 의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간 학교 교육에서는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을 어려운 일로 여겨 왔으나 이미 학습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Eric, 2016).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가치 체계 간의 충돌 상황과 모호함과 불확실함에 직면하고, 이 과정에서 보편 타당성이나 의견 일치만을 추구하기보다 상호주관성을 전제로 주체들의 합리적인 소통 과정 구성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가치 지향성과 공동체의 이익이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나, 가치 체계가 충돌하는 모순적인 상황 등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유용하다.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합리성은 결과보다 과정에 요구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합의를 이루었더라도, 합의된 내용은 임시적이며 공론장의 영역에서 폐기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공적 논의는 완전한 해결책이 도출되는 데에서 완료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임시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에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에서는 문제 상황의 역동성을 전제로 합의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숙의적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 숙의성은 소통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적 성찰과 반성적 사고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며 의견을 변화시키는” 점에서(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 45) 역동성을 증진시킨다. 합리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숙의 과정은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만족시킨다.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

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소통도 긍정적이다. 실행 가능한 결론이 없더라도 합의 형성 과정은 사회적 행위자의 의식과 행위를 바꾸는 힘을 내포한다(서문기, 2007).

이는 합리적인 소통 행위가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행위로서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인 실천 행위로서 참여자 간 행위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실천성을 지향하는 근간이 된다. 시민 사회란 시민의 합의와 지지를 근간으로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므로, 시민 사회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정체성, 가치, 태도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개인화된 정치 참여는 개인의 이익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공공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참여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 참여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공동선의 추구 관점에서 탐색하며,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해당된다.

김우미(2009)에서는 합리적 의사소통 역량이 시민성 구현의 핵심 역량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를 시민성 이론의 가치 충돌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현대 시민 사회의 가치 체계는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치 체계는 현실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변증법적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이중적인 윤리관을 극복하고, 가치 체계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전제함으로써 가치 충돌의 문제를 공정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또한 합의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갈등 상황을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동선 구성의 매커니즘을 해명할 수 있다. 합의 자체가 목적일 경우 그 합의는 결국 권위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합리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 즉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상호 이해를 통한 합의의 밑거름이며, 참여자들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무를 지니며, 합의된 사항은 공론의 영역에서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판단과 참여를 동시에 포함하며, 왜곡된 권력에 대해 성찰력을 제공한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비판적이며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어교육에서는 교과 본질적인 목표를 '비판적 문식성'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사회에서도 유효한 사회 변혁적 독서의 전제가 된다(이삼형, 2017)는 것도 이러한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공공 소통에서의 합리적인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합의하며, 한편으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맥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사실에 대한 정치(精緻)한 이해, 현 상황의 문제 해결, 미래 통찰력(foresight)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국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정성, 정보성, 합리성을 갖춘 소통 과정을 통해 실제적(authentic)으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논변하며,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성찰하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된다. 시민 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 역량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역량과 공동체 역량으로서의 시민 참여 역량(civil literacy)을 바탕으로 한 협치체 구성의 필수 요건이다.

4. 결론

여기에서는 국어과에서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교육이라는 심층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구성하기 위한 국어교육의 역할을 살폈다. 민주주의 사회는 합의와 지지가 사회적 의사 결정의 근간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 관계를 지닌 주체들이 사안에 따라 갈등하는데, 만민의 정치적인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설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민주 시민 사회의 뿌리인 것이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억압적이지 않은 상호 이해를 통한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한 합의의 밑거름이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인식의 판단과 참여, 왜곡된 권력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각 개인의 자유의사와 의지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사회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일차적으로는 문제를 인식·탐색·성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향은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국어과 교육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사회 구성을 위해 새롭게 출현한 소통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예측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았으나, 왜곡되거나 편향된 소통 상황의 측면이 나타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과 국어 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현재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한편, 교과 본질에 대한 재인식 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공공 소통 상황에 대한 선행 논의를 통해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세대 격차와 전 지구적인 이익 주체가 등장하였으며, 소통 기회는 늘어났으나 공공성보다 개인적 가치를 선호하는 참여 경향으로 인해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나 실천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디지털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사소통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는 기능 중심의 접근 관점을 넘어 시민 교육이라는 심층적인 구현함으로써 가능하다. 국어 교육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모순적인 가치 충돌 문제를 다루고, 속의 결과보다 과정을 성찰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모순적인 가치 충돌 문제와 쟁점에 대한 이해 능력, 합리적 추론을 근거로 한 권력 성찰 기제로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행위의 조화를 꾀하는 변증법적인 합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장을 형성하고 의사소통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 역량의 근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Ministry of Education, 2015 School Curriculum of Korea
- 권기현(2009),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 전자정부, 정보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4(2), 21-41. Kwon, K. H. (2009), E-government and governance : e-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and governance, *State Administration Research* 4(2), 21-41.
- 김관규 · 김관옥(2006), 전자민주주의의 정치참여확대 기여에 관한 제논의, <언론과학연구>(한국지역언론학회) 6(2), 43-75. Kim, K. K., & K. O. Kim (2006) On Disputes over Political Participation Contributed by Electronic Democracy, *Communication Science Research* 6(2), 43-75.
- 김성배(2017), e-청원 제도와 법적 쟁점.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46(2), 91-129. Kim, S. B. (2017), e-petition and legal issues, *Public Law* 46(2), 91-129.
- 김우미(2009), 시민성의 전제로서 의사소통 합리성, <시민교육연구>(한국사회과학회) 41(2), 47-71. Kim, W. M. (2009), Communicative rationality as a premise of citizenship,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2), 47-71.
- 노승용(2009), 효과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시민의식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한국국정관리학회) 19(1), 135-157. Roh, S. Y. (2009), Digital citizenship analysis for effective digital governance, *Society and administration* 19(1), 135-157.
- 매일경제미래경제보고서팀(2016), <정치의 미래-대한민국 미래 경제 보고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가 온다>, 매일경제신문사. Maeil Business Newspaper (2016), The future of politics - Korea's future economic report, the era of digital democracy comes.
- 박승관(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한국언론학회) 45(1), 162-194. Park, S.-G. (2000), The Significance of Civility in Deliberative Democrac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5(1), 162-194.

- 박창호(2016), 인터넷 집단주의의 이해, <사회이론>(한국사회이론학회) 49, 69-100.
Park, C. H. (2016), Understanding Group Activities in Internet,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49, 69-100.
- 변중현(2006), 세계시민성 관념과 지구적 시민성의 가능성, <윤리교육연구>(한국윤리교육학회) 10, 131-161. Byeon, J. H. (2006), The Possibility of Global Citizenship,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10, 131-161
- 오미영(2011),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 <현상과 인식>(한국인문사회과학회) 35(3), 39-58. Oh, M. (2011), Internet and Group-Polarization in Communication, *Hyonsang-gwa-Insik* 35(3), 39-58.
- 송현정(2003), 사회과 교육의 목표로서 시민성의 의미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한국사회과교육학회) 35(2), 45-60. Song, H. J. (2003), A Study on the Meaning of Citizenship as a Go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5(2), 45-60.
- 이삼형(2017), 학교 변화와 독서 교육, <독서연구>(한국독서학회) 42, 9-28. Lee, S. (2017), School Change and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2, 9-28.
- 이예경(2012), 확증편향 극복을 위한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의 원리 탐구, <교육과학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43(4), 1-31. Lee, Y. K. (2012), Improving Critical Thinking Skills by Overcoming Confirmation Bia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4), 1-31.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Shin Kori 5·6 Committee for Public Relations, Deliberation and listening, The record of the process.
- 장소연·류용재(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한국소통학회) 16(1), 45-85. Jang, S. & W. Ryoo (2017), Online Communities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Hatred : Focusing on the Cases of Ilbe and Megalia,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16(1), 45-85.
- 조화순(2010), <디지털 거버넌스-국가, 시장, 사회의 미래>, 서울 : 책세상. Cho, H. S. (2010), *Digital Governance : Governant, Market, Society*, Seoul : Checksesang.
- 최종덕(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한국사회과교육학회) 39(4), 135-161. Choi, J. D. (2007), The Formation of Social

- Capital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9(4), 135-161.
- Andersson, E. (2016), Producing and Consuming the Contraversial-A Social Media Perspective on Political Conversations in the Social Science Classroom,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15(1), 6-16.
- Aren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진우 · 태정호 역(1997), <인간의 조건>, 서울 : 한길사.
- Sandel, M. J. (2009),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Penguin, 이창신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 김영사.
- Dascal, E. (2018), Lets be careful out there" : how digital rights advocates educate citizens in the digital age.
- UNESCO (2011).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bstract

The Rol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in Digital Age

Lee, Sam Hynung·Kwon, Dae Ho·Lee, Jeesun

In this study, we aimed to construct rational communication education conten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construct ideal digital governance. To do this, we first recognized the problems of communication through digital technology, and re-recognized the intrinsic nature of the curriculum. As socio-cultural change accelerates and the global network is formed,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pluralistic interests and values. On the other hand, each participant actively participates in public debate, but tends to prefer personal values rather than public values. This implies that rational communication education should play a role in guiding public social action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oriented approach to construct digital governanc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ints to be considered in the rational communication education are suggested considering each aspect of the problem situation and solution. In the contextual aspect, the social media should be used to construct the classroom as a public space where the value system or interests conflict, and students should face ambiguity and uncertainty. In terms of problem solving, it is necessary to educate about deliberative communication that emphasizes discussion process rather than consensus.

Key words : Digital Governance, Citizenship, Reasonable Communication, Korean Education, Critical Thinking, Participation

이삼형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301호 / hyung@hanyang.ac.kr
권대호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301호 / penemy@hanmail.net
이지선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301호 / perfectblue4@naver.com
접수일자 : 2018. 4. 30. / 심사일자 : 2018. 6. 2. / 게재 확정 일자 : 2018. 6. 10.